

“출퇴근·등교도 OK”…남구 ‘공공 무료셔틀’ 호응

학교·관공서·치매안심센터 등 공공시설 잇는 2개 노선 하루 이용객 50여명…“시내버스 공백 메워 매우 만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간을 다녀 주니 편하죠.”

광주 남구가 자치구 최초로 시범 도입한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가 한 달여 만에 주민의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공공시설 접근성이 떨어지고 배차가 긴 시내버스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특재 이동 서비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서다.

8일 오전 남구 임암동의 한 버스정류장. 25인승 미니버스 한 대가 도착하자 3~4명의 주민이 차례로 탑승했다. 이미 버스 안에는 60~70대 어르신들이 타고 있

었고, 서로 “잘 지냈나”며 인사를 건네는 등 동네 단골 버스 특유의 정다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운전기사는 승객이 오를 때마다 “모두 앉으셨죠? 출발하겠습니다”라고 안내하며 안전 운행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이들이 이용한 차량은 지난달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남구의 무료 셔틀버스다. 대촌동행정복지센터에서 효전1지구 스마트도서관, 송암동행정복지센터, 송원초, 인성고, 효천어울림도서관, 치매안심센터, 남구청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시설을 잇는 노선으로, 미니버스 2대가



8일 광주 남구 임암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치구 최초로 남구가 시범 도입해 운영 중인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25~55분 간격으로 하루 11차례 운행한다.

시내버스가 닿지 않거나 정류장이 멀어 불편했던 지역을 직접 연결하면서 이용객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기준 한 달 이용자는 400여명, 하루 평균 40~50명에

달한다. 노선에는 학교와 치매안심센터 등이 포함돼 있어 10대 청소년부터 중장년층, 고령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고루 이용하고 있다.

김광미씨(55)는 “구경 앞을 지나는데 다 환승도 쉬워 일주일에 두세 번 꼭 탄

다”며 “시내버스는 동선이 애매하고 배차가 길어 불편했는데 셔틀버스를 이용하면서 이동 시간이 확 줄었다”고 말했다.

운행 지역 확장을 요구하는 의견도 꾸준히 있다. 최재철씨(70)는 “치매안심센터를 갈 때마다 시내버스 정류장과 거리가 멀어 힘들었는데 셔틀버스는 바로 앞까지 데려다줘 큰 도움이 된다”며 “양과동 쪽으로도 노선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남구는 향후 실제 이용 데이터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노선과 운행 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공공시설 무료 셔틀은 대촌·효천 일대 교통 소외지역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윤용성 기자 y01404@

한빛1호기 내년 9월 28일까지 가동 중단

수면 연장 절차…시민단체 20일 ‘영구정지’ 선포식

한빛원자력본부는 8일 “한빛원전1호기 제28차 정기검사 및 계획예방정비에 따라 9일부터 내년 9월 28일까지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9일부터 2026년 9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정기검사와 9일부터 2026년 9월 16일까지 이뤄지는 계획예방정비에 따른 것이다.

해당 기간 한빛원자력본부는 정기검사 수검, 원전 연료 교체, 기기 정비, 설비 점검 등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남 영광·함평·장성군과 전북 고창군 등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환경영향평가 △주거적 안전성 평가 △사

고관리계획서 △최종 안전성보고서 △한수원 자체계획서 등을 제출했다.

한빛원전은 총 6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다. 이중 한빛1호기는 1985년 12월 23일 운영 허가를 받았다.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되는 시점은 이달 22일이다.

또 한빛2호기는 1986년 9월 12일 운영 허가를 받아 오는 2026년 9월 11일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수명 연장을 위해 설비보강 등 작업에는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수명 연장 기간은 10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1·2호기와 함께 고려원전 3·4호기 등 총 4기의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심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등으로 이뤄진 시민단체들은 오는 20일 오후 2시 한빛발전소 정문 앞에서 ‘한빛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진행한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g98@gwangnam.co.kr



‘서구 자원봉사자 대회’ 8일 광주 서구 치평동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서구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김이강 서구청청과 참석자들이 빛나라 서구 퍼포먼스를 펼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서구 자원봉사자 대회’는 2025년 활동 영상 시청과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정기차량 등이 진행됐다.

예술은 일상에서…광주 학교 복합예술공간 구축

시교육청, 18억4000만원 투입 20개교에 전시·공연장 마련

광주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복합예술공간’이 구축됐다.

광주시교육청은 8일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8억4000만원을 투입해 20개 학교에 실내의 예술 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 실내 공간 ‘예(藝)누리’와 야외 공연장 ‘빛고를 버스킹’ 설치가 핵심이다. 광산중, 천곡중 등 13개 중학교와 전남공고, 살레시오고 등 7개 고등학교가 대상에 포함됐다.

실내에 조성된 ‘예누리’는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복합예술공간으로, 학생들이 공연, 전시, 동아리 연습을 하며

꿈과 끼를 발산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현재 광산중 ‘아트브릿지’, 천곡중 ‘예술마루’ 등 10개 학교에 ‘예누리’가 조성돼 학생 예술동아리 작품 전시, 학습결과물 전시, 교직원·학부모 작품 전시 등 일상 속 예술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학교 내 야외 유휴공간은 학생공연장 ‘빛고를 버스킹’으로 탈바꿈했다. 시교육청은 조대부중 ‘리듬 놀이터’를 비롯해 윤리중 ‘야외공연장’ 등 10개 학교에 ‘빛고를 버스킹’을 조성했다.

시교육청은 복합예술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공간 활용 방안을 공유한다.

이번 사업에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9월 광주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화관에 ‘광주 학생예술누리터 2관’을 개관했다. 광주학생예술누리터는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적 체험을 즐기며, 예술적 상상력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마련한 예술교육 전용공간이다. 지난 2021년 광주중앙초등학교에 1관을 조성했으며, 이후 문화·예술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관을 건립했다.

또 학생들이 끼와 재능을 뽐낼 수 있는 학생예술교육 페스티벌, 학생 야외 버스킹, 학생 주도 오디션 ‘광탈페(광주학생탈린트페스티벌)’,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문화예술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7:29	달해	22:02
맑음	17:20	달해	11:24



광주		-1~10
목포		1~9
여수		1~10
순천		-1~10
구례		-2~10
광주		-1~10
임도		0~11
목신도		6~10
전남		-2~11
진도		1~9

목포	미물 (고)	04:49 / 17:45
	샘물 (저)	10:04 / 22:54
여수	미물 (고)	12:23 / --:--
	샘물 (저)	05:41 / 18:29

학교 ‘폭발물 설치’ 현장수색

만년필 ○··광주 남구 한중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이메일이 소방청에 전달돼 당국이 현장 수색에 나서.

8일 남부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7분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이메일이 소방청에 접수.

경찰은 즉시 장비 14대와 초동 대응팀 등 약 36명을 투입해 학교를 수색했지만 폭발물 등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소방 등도 현장에 투입됐으나 이상한 물체나 징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당국은 오전 9시10분께 수색을 종료했고, 운동장 등으로 대피했던 교직원과 학생들은 모두 교실로 입실.

경찰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 중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학교 인근을 순찰하고 있다”면서 “협박 메일 발신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01404@

무인점포 ‘상시 피해’ 호소…“양심에 맡길 수밖에”

CCTV·양심거울 설치해도 일상화…대다수 소액 절도 업주들 “봐주면 더 대담해져”…출입시스템 강화 필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무인점포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노린 절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피해 업주들은 대다수가 소액 절도여서 대응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 한다.

8일 광주·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 지역 무인점포는 292곳이 운영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무인세탁소 92곳, 아이스크림점 52곳, 스터디카페 31곳, PC방 27곳, 코인노래방 27곳, 사진관 18곳, 카페 19곳, 키즈카페 6곳, 게임제공업 16곳, 밀키트 매장 4곳 등이다. 전남 지역

무인점포는 PC방, 노래연습장 등 4개 업종 104개소이다.

문제는 무인점포가 절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주들은 출입구에 절도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매장 곳곳에 CCTV와 양심거울을 설치하는 등 각종 방법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별 소용이 없다.

주로 5000원 이하의 간식류나 1만~3만원대 제품이 주 대상이다 보니 업주들은 “처음 몇 차례는 그냥 넘기는데, 그렇게 봐주다보면 변행이 점점 대담해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복구 복동의 한 무인점포는 최근 ‘훔쳐가신 분! 다리가 불편해 보여 잡았는데, 3번까지는 넘어갔습니다. 또 가져가시면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는 경고문과 함께 CCTV 캡처 사진을 게시했다. 업주는 “동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여러 차례 물건을 가져갔지만 현장에서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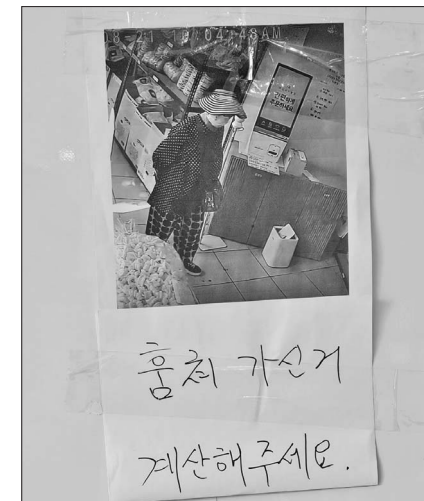
복구 유동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은 상황이 비슷하다. 매장 중앙에 실시간 CCTV 화면을 두고 양심거울까지 설치했지만 “2~3개월에 한 번씩은 절도가 발생한다”고 호소한다.

광주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10곳을 운영 중인 김모씨(38)는 “절도자들이 사건이 발생하면 CCTV, 출입기록, 결제특징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반박을 막을 수 있어 CCTV 사진을 붙일 수밖에 없

다”며 “대부분 소액이라 좋게 넘기려 하지만 범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다. 결국 30% 정도만 경찰 신고까지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통계에서도 절도 증가세는 뚜렷하다. 2023년 광주 지역에서 접수된 무인점포 절도 사건은 219건에 달했다. 전남은 같은 해 76건에서 2024년 92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11월 기준 87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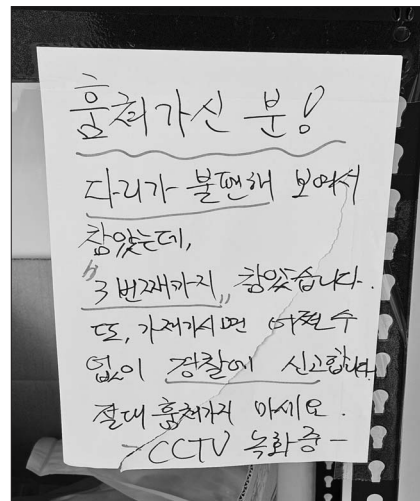
경찰도 예방을 위해 안내 스티커 배부, 방법센서 설치 지원, 순찰 강화 등을 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점포 특성상 사건이 발생하면 CCTV, 출입기록, 결제정보 등을 일일이 분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되



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신고 중심의 기존 방식만으로는 무인점포 절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무인점포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만큼, 무인점포 특성에 맞춘 별도의 제도적 안전장치와 고도화된 기술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인점포 특성상 절도 범죄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경찰력 강화가 능사가 아닌 만큼, 점포 자체적으로 출입기록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경비업체를 이용하는 등 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임재용 인터넷기자 djawodyd0316@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